전동Kill보드, 안전모 없는 위험한 주행

광주서 술 마시고 헬멧 안쓴 채 킥보드 타던 20대 넘어져 사망
광주·전남 지난해 사고 170건…2년간 미착용 1만3000건 적발
사용 후 도로 위 등 마구잡이 방치로 보행 방해·교통사고 위험

광주지역 대학생이 음주 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 A(20)씨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일 뒤 숨졌다.

광주·전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PM 관련 사고가 지난 2018년에는 17건(18명 부상)에 불과 했지만 지난 2021년 147건(1명 사망, 168명 부상)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0건의 PM사고로 1명이 숨지고 191명이 다쳤다.

운전자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되는 등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광주·전남 곳곳에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을 살펴본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한 이용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에서 30분 가량 지켜본 결과 6명의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학교로 들어갔다.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이어폰을 낀 상태로 보행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질주했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 인근에서는 어린 학생 2명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다. 또 아무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이용객은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주행중인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기도 했다.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질주하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기도 했다. 사용 후 도로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진 전동킥보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낙제점이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무면허, 음주 등을 단속한 결과 1만 7559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각각 1149건, 534건에 달한다. 정원초과도 35건이나 적발됐다.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의 도심 질주가 이어지는 것은 20~30세대들에게 이른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만 5개 사업자가 4300대가 넘는 전동킥보드를 경쟁적으로 비치한 탓에 접근이 쉽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PM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이용객들은 범칙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운전자 몸으로 그대로 받게 된다"며 "특히 머리를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인근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남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이기홍 항일운동·장흥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 규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 이기홍(1912~1996)씨의 항일독립운동과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제75차 회의를 열고 '이기홍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독립운동',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씨는 황동윤, 김홍배씨 등과 함께 지난 1933년 5월 14일 해남군 북평면 성도암에서 '전남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구원부(救援部) 책임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3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민반, 청년반 등을 결성해 완도적색농민조합 고금도 지부 결성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이기홍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흥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 장흥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각 지역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장흥경찰서 등에 구금된 이후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앞바다와 안양면 사촌리 탕수배기 인근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위 의혹'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3명 직위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3명이 직위 해제됐다.

26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직무태만·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간부급 직원 A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이달 초 직원 B·C씨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한 과기부 복무 감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과기부는 올해 초부터 직접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과학관 측은 "과기부가 올해 초 감사를 진행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것은 맞다"며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전남 화물차 사망자 급증

지난해 70명…전년비 15.7% ↑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가 공개한 '광주전남지역 화물차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21년 72명, 2022년 59명, 2023년 70명 등으로 2023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8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 등이었다.

이에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고속도로 주요지점에서 대형화물차를 중심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적을 위한 물품적재장치 등의 '불법개조', 적재물 낙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적재불량', 대형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조작' 등을 주로 단속한다. 또 화물 운송사를 방문해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외(과적검문소, 공영차고지)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특정시간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 교통량 급증시기 특별단속 등도 병행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학교 전교생 10명 이하만 통·폐합

도교육청, 소규모학교 많은 여건 고려 적정 통·폐합 추진

전남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전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202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고려, 전년과 같게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되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보다 강화한 조처다.

장기 휴교 중인 학교의 경우 재개교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학교 시설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재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 7교에 대해 우선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2만4991명이 감소(12.5%)했으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도 413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47.7%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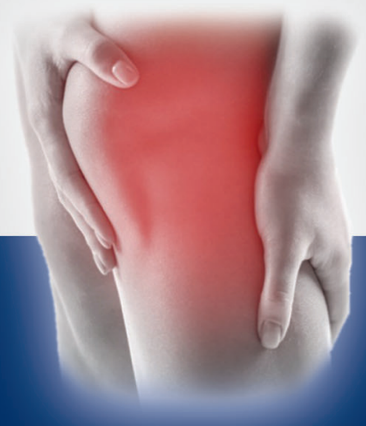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개교(초 18개교·중 1개교·고 1개교)에 이른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는 7개교(35%)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시설이나 교육기자재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한편 또래 집단 부족으로 학습 동기 저하, 사회성 발달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 기준, 분교장 개편, 학교 통합·이설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박진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폐합된 학교에 지역복합화시설 유치 등으로 새로운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면 지역 소멸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드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